

도입 20년된 농작물재해보험 작년 가입률 38.9%로 '저조'

지역 따른 품목별 요율격차·보험료 할증·손해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흘렀으나 지난해 가입률 38.9%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2017년 가입률 30% 도달 이후 지난해 기준 전체가입률 38.9%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2019년 기준 당근(89.3%), 단호박(85%), 사과(84%), 배(69.5%), 벼(46.7%) 등 가입률 상위 10대 품목을 제외하고는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품목에서 전체 평균 가입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위 18품목은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차 9.6%,

참다래 7.7%, 무화과 7.4%, 고구마 7% 순으로 나타났으며 쪽파의 경우 가입률이 0.9%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 보상범위가 낮아 경영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택 의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지역에 따른 품목별 요율격차 둘째, 보험료 할증 셋째, 부적절한 손해평가에 따른 문제로 요약 된다.

첫째, 품목별 요율격차의 경우 2020년 기준 포도 42%, 복숭아 41%, 지두 33%, 대추 28% 등 같은 품목임에도 지역별로 요율격차가 심하다.

이는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십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입률제고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둘째, 보험료 할증 문제다. 보험료 할증은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적용되는데 재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해당 지역 내 다른 농가가 재해로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할증 받게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다.

셋째, 손해평가에 따른 문제다.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 인력들이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의 손해평가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평가 전문성에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손해사정인의 피해를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 전체가 도복 된 논에서 손해사정인이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은 벼 샘플 채취, 샘플 중량과 벼 수분체중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낮은 손해를 산정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원택 의원은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을 행정구역으로 산정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동일인 행정구역 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요율 편차 문제, 행정구역 중심의 보험료 할증문제, 손해사정 전문성 문제 등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방역에 구멍 생기지 않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남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 ‘주먹구구식’

‘BIG5’ 중 4개 병원 제증명료수의 상위 1~5위... 서울아산병원 신고액은 ‘0원’

회계공시 대상 절반 제증명료수의 ‘0원’ 신고 ‘법규정 위반’... 복지부 제재 ‘0건’

한 종합병원은 법적 상한액이 2만인 일반진단서를 불법 제출 용이라는 이유로 10만원에 발급하고 있다.



만원, 해운대백병원 18억4,010만원, 서울성모병원 18억3,960만원 순이었다.

일명 ‘BIG5’라고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이 단 한 곳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를 차지했고 서울아산병원은 제증명료 수익을 매년 ‘0원’이라고 신고하고 있다.

BIG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회계연도 제증명료 수익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0원’ 신고를 했고 심지어 1년 만에 0원에서 역대 금액을 오가며 ‘뒤죽박죽’인 곳도 있었다.

의원실 파악 결과 일부 의료기관은 ‘기타수익’ 등 다른 항목에 제증명료 수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법규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르면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전 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즉 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임의로 없애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호상 기자

같은 규정에서 의료수익 중 ‘제증명료 수익’ 항목은 기타수익과 구분해 작성하도록 과목이 별도 명시돼 있다.

의료법상 이 같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제재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2월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급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며 “하지만 병원 회계 공시가 실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으로 이어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 이는 비급여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법적 공개 대상인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혐의 187명 검거... 경기도가 ‘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이었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호상 기자

작년 과속운전 적발 차량 1240만건... 3초마다 1대

작년 한 해 과속운전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이 3초마다 1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정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적발된 과속운전은 1,240만건으로 2015년 847만건에 비해 4년 새 3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과속 교통사고(최고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또한 2015년 593건에서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19년에는 1,124건을 기록하며 4년 새 2배 증가했다.

또한 60km/h 초과한 과속 교통사고가 2015년 62건에서 2019년 178건으로 약 3배 늘어 증가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살인사건 검거 보상 ‘경찰서마다 달라요’

올해 1~6월 기준 경남 100만원·제주 30만원으로 큰 편차 민주 한병도 의원 “보상금 심사 지방청 단위로 실시해야”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중구난방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등을 지급한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본격 가동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

위 활동을 가진 바 있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적극 논의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지난날 16일 전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의사인력 5명 중 1명

“의무 보수교육 안받아”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 5,400명으로 이 중 62만 1,593명이 이수했고 7만 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 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 1,2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 2018년 22%, 2019년 23.9%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작년 직업교육훈련 참여인원 257만명

전년보다 40% 수준 ↓... 민주 윤준병 의원 “훈련 지원 강화를”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과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참여 인원이 2018년 643만명에서 2019년 257만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업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만4,821개 기업 643만 6,000명이 교육에 참여했지만 2019년에는 14만9,106개 기업 257만3,000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16,000명에서 2019년 153만5,000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중 및 우선 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